

“빛더미에 깔린 소상공인… 장기상환 등 채무조정 절실”

이터뷰

최승재 국회의원

“코로나 팬데믹 시절 국가 공권력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였다.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들을 위해 최대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합프로그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승재 국회의원이 주택담보대출도 50년 만기 상품이 있듯,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리볼빙 시스템’과 같은 장기상환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4일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 소상공인을 대변하는데 첨병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방역 조치로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소급적용 등 ‘직접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외치며 여론 형성에 힘써왔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위해 삭발도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시절 취해진 영업정지, 영업제한 등은 유효성, 합리성, 정당성 차원에서 매우 무리한 조치였다. 물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은 닫았는데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나 공과금 등 고정비를 계속 내야 했다. 지원이라고 해봐야 대출뿐이었고, 그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최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국민의힘에서 4년간 소상공인 목소리 대변 코로나 팬 ‘직접 손실보상’ 강력 주장 펼쳐 성실상환자에 ‘리볼빙 시스템’으로 재기 돕고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제’로 은행문턱 낮춰야 인력 등 고비용구조 획기적 전환 대책 만들어 서민·민생정책 근원적 문제 반드시 해결 필요

말 당시 685조원 수준이었던 자영업자 대출은 804조원(2020년 말), 909조원(2021년 말)을 거쳐 2022년 말엔 1020조원까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약 104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돈도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원(2023년

2분기 기준)까지 늘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시절 보증서를 들고가면 대출이 보다 수월했다. 은행들이 부담할 리스크는 없었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지

만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질 못했다. 이후 금리까지 오르면서 빌린 돈이 많았던 소상공인들은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은 2021년 당시 26조7102억원에서 2022년 말엔 36조2071억원까지 늘었다.

최 의원은 이를 놓고 “은행들은 로또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대출을 해준 죄밖에 없다고 항변할 지 모르겠다. 그 와중에도 은행들은 퇴직자 명퇴금과 임직원 복지를 더 늘렸다. 지주회사는 힘이 커졌지만 내부 통제는 부실해졌다. 금융사고는 곳곳에서 벌어졌다. 은행은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순이익을 거뒀지만 소상공인들은 가장 많이 힘들어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은 문재인 정부가 겪고 대응했지만 후속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이 그것이다.

그는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한국형 장기 상환 리볼빙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액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고 더 불어경영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디지털 전환 등 혁신 교육을 받고, 전업·재창업 등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선 원리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의 문턱을 좀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데도 20년의 시간이 걸렸다. 제1금융권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필수적인 신용점수, 담보, 서류 외에 전년도 소득금액을 증명하면 대출액을 늘려줘야 한다. 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문 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 공제가 우선이다. 은행을 설립하기위해선 자본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은 (문치기 쉽지 않아) 스스로 자본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출발은 소상공인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총선에서 경기 광명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최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3명이 나섰던 경선을 지난 29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 문제는 국가의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 (국회의원)선거판에서 근원적 문제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에 앞서 서민정책이자 민생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과 관련해 인력 등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가르쳐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정책에선 매우 중요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농업 디지털전환·R&D혁신 등 고소득 창출… 청년창업 맞춤형 지원”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스마트농업·푸드테크 등 집중투자” R&D 혁신방안 이달 중 마련 계획

정부가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적극 활용하고, 2000억원 규모의 청년 대상 펀드를 추가 결성하는 등 창업과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정책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또 농업의 디지털 전환 및 R&D 체계 혁신 등을 통한 고소득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 수출과 관련해서는 정상 외교를 활용해 적극적 농업외교 전략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첨단기술 활용이 확산하면서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첨단기술과 타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청년층의 스마트농업 등 취업 및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 음성군의 ‘드론 자율봉사단’이 무인동력비행장치를 활용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를 재작년(1만2000명)과 작년(1만8000명) 대비 증가한 2만2000명으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공공임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혁신밸리 보육센터(연간 208명, 20개월) 수료생의 창업기반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최대 3년)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 13개소로 늘어난다. 혁신밸리창업보육센터에서 청년농업인 교육을 실시한 뒤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예비창업 단계를 다진다. 그 이후 취·창업으로 연결되는 수순이다.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규모를 기존의 514억 원에서 689억 원으로 늘렸다. 동시에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를 종전의 1인당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지난 10월 확대한 바 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농촌보급자리 8곳을 더 조성해 총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00억 원 규모의 청년 대상 펀드를 추가로 결성해 창업·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개편 및 기술 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특화연구,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 ‘꼭 필요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R&D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대 중점 분야(스마트농

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3대 중점 분야에 책정한 투자액은 941억 원으로 2024년 농식품부 R&D 예산의 43.6%를 차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K-푸드 정책과 관련해, 할랄·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동 정상순방을 계기로 성사된 기업 MOU(7건)가 수출·수주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지원단을 발족해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K-라이스벨트’를 본격 추진해 농업기술의 해외 전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